

전남도 '엇박자 행정' 도마위에

호남고속철 노선 대응도 못하고 '우왕좌왕'

구제역 확산 불구 해돋이 행사 자체 요청만

전남도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목포(임성리)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 선정 평가 결과 자료를 통보받고도 일주일 가까이 공식 입장은 커녕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가 하면,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예방 백신을 접종시키기로 결정했는데도 시·군의 '해돋이·해맞이 행사'에 대한 취소·자제 요청 대신, 축산농가의 행사장 참석 자체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 "노선 선정 결과 17일 통보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3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17일 호남고속철도 노선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

가 결과를 전남도 관계자에게 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평가가 끝난 뒤 4개 대분류(교통·사업성·정책·환경)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와 22개 세부 평가 점수 등을 함께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대로라면 전남도는 지난 17일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확인했지만 '공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지껏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무너만 고속철'의 노선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았는데도 무안공항 경유도 고속 신선이 아니라 고속철 도입 취지 및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노선 선정이라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거센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외동포 등 복수국적 허용

해외 동포와 결혼 이주민, 글로벌 인재들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국적법이 새해 1월 1일 발효된다.

새 국적법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갖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우리 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사회통

합, 국가경쟁력 강화, 저출산 위기 해소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작년 말 법무부가 발의해 지난 4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4일 공포된 개정 국적법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공포 직후 시행에 들어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전면 발효된다. /연합뉴스

국제만평

- 김종우



티켓몽키에서는 매일 밤 11시, 광주의 모든 곳이 반값이 됩니다!

<http://www.t-mong.co.kr>

50%~90%

지금 티켓몽키에서는 할인권 무료 증정

티켓몽키 가입회원 모든 분들께 팝아티스트 키스해링 특별전 2,000원 할인권 무료!

언제까지? 2011년 1월 3일까지!
지금 바로 티켓몽키의 회원이 되어보세요.

티켓몽키 입점 문의 070-7581-7766

티켓몽키에서는 광주의 모든 곳을 50%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NAVER 티켓몽키 를 검색해보세요.

부동산 매각 공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접 | 건물내 상가 성업중



- 사업번호 : 광주지법 2009타경 35086호(경매24개)
- 매각대상 부동산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 752-45 위치상 건물 총면적 6,189m²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 752-45 위치상 건물 총면적 8,828m²
(태우스파랜드 5층짜릿방불구 및 상가다수)
- 최초법사가 (경정가) : 10,193,861,600원
- 당회최저입찰가 (5차) : 3,651,224,000원
-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30일(목) 10 : 00
광주지방법원 경매법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경주농협 체권관리팀(054-777-8130~4)

안강농협 체권관리팀(054-761-4485)

2010년 11월 29일

경주농업 협동조합
안강농업 협동조합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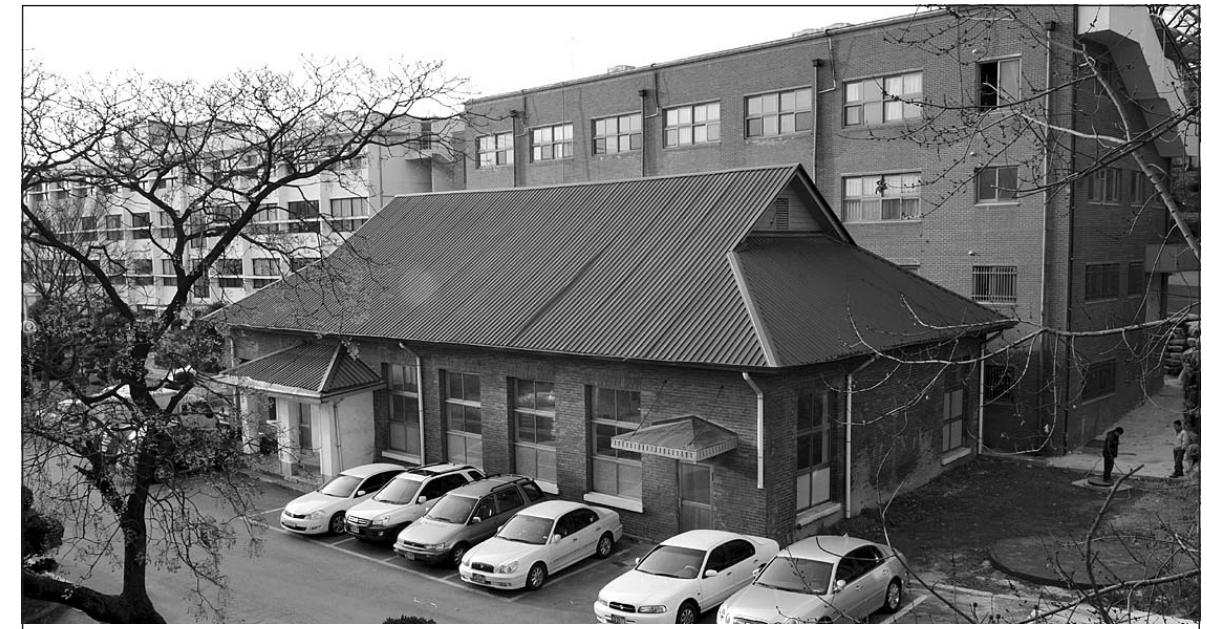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못받을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010-8494-9484



1930년대 지어진 광주의 근대건축물인 수피아여고 무용관이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철거를 면했다. 사진은 23일부터 철거될 예정이었던 수피아여고 무용관.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피아여고 강당 하마터면 헐릴 뻔

1932년 건립된 광주 근현대사 귀중한 건축물

문화재위원 등 반대로 철거방침서 보존 선회

사라질 뻔했던 광주의 근현대 건축물이 가까스로 철거를 면했다.

이 무용관은 붉은 벽돌로 지어졌다. 지난 193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피아여고 무용관이 철거되며, 면적은 300여 m²로 추정된다.

1910년 3·1일 만세운동으로 수

피아여고가 폐교되자 당시 전남대

의대 모태인 광주의전이 무용관

침을 칠희한 것이다.

광주 수피아여고는 23일 "이번 주 내로 교사 앞으로 가로막고 있

는 무용관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전문가들이 근현대건축물로

높은 가치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와 당분간 보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무용관은 붉은 벽돌로 지어

졌다. 면적은 300여 m²로 추정된다.

1910년 3·1일 만세운동으로 수

피아여고가 폐교되자 당시 전남대

의대 모태인 광주의전이 무용관

침을 칠희한 것이다.

전득열 전남대 교수는 "1930년

대 건립된 건축물은 지역 내 10개

도 안 될 정도로 허귀하다"며 "없

어진 뒤 소중함을 깨닫기보다 사

라지기 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피아여고를 찾았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에도 1930년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피아여중

별관(1930년대 건립 추정)이 철거

되고 신식 건축물이 들어섰으며,

지난 2000년 남광주역사(1934년

건립), 한국은행 광주지점(1950년

건립), 2007년 광주 YMCA 금남로

관 앞 일본식 목조주택(1910년대

건립) 등이 훤히도 없이 사라진 바

있다.

수피아여고 관계자는 "언제부

터 전문가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

한 건축물이라고 하니 보존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출범 '잰걸음'

23명 채용 ... 27일부터 직원 워크숍

유기농법 '명인' 지정

도의회 조례제정

전남지역에서 유기농법 농사만 잘 지어도 '명인'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23일 제 256회 제 2차 정례회 제 4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 유기농 명인지정 운영조례'를 의결했다.

김동주(당선 2·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유기농법 확산과 소득창출, 생명 식품 산업 육성계획 등의 주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벼·밭작물·과수·채소·축산 등 6개 분야에서 5년 이상 독특한 유기농법 실천기술을 정립한 농민은 명인으로 지정되게 된다.

/김지기자 dok2000@

gnj@korea.com

전남지역에서 유기농법 농사만 잘

지어도 '명인'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23일 제 256회 제 2

차 정례회 제 4차 본회의를 열고 '전

남도 유기농 명인지정 운영조례'

를 의결했다.

김동주(당선 2·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유기농법 확산과 소

득창출, 생명 식품 산업 육성계획 등

의 주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벼·밭작물·과

수·채소·축산 등 6개 분야에서 5년

이상 독특한 유기농법 실천기술을 정

립한 농민은 명인으로 지정되게 된

다.

/김지기자 dok2000@

gnj@korea.com

전남지역에서 유기농법 농사만 잘

지어도 '명인'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23일 제 256회 제 2

차 정례회 제 4차 본회의를 열고 '전

남도 유기농 명인지정 운영조례'

를 의결했다.

김동주(당선 2·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유기농법 확산과 소

득창출, 생명 식품 산업 육성계획 등

의 주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벼·밭작물·과

수·채소·축산 등 6개 분야에서 5년

이상 독특한 유기농법 실천기술을 정

립한 농민은 명인으로 지정되게 된

다.

/김지기자 dok2000@

gnj@korea.com

전남지역에서 유기농법 농사만 잘

지어도 '명인'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23일 제 256회 제 2

차 정례회 제 4차 본회의를 열고 '전

남도 유기농 명인지정 운영조례'